

이슈브리프

No. 2025-28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향후 북-중-러 관계 전망

차두현 부원장

이동규 연구위원

2025-09-08

9월 3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纪念日, 이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习近平, 이하 시진핑)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Vladimir Putin, 이하 푸틴)과 나란히 망루에 섬으로써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태세를 과시했다. 김정은의 이번 전승절 참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러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의 관리, 러시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 압박, 그리고 북-중-러 결속의 시위를 통한 대미 협상력의 증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대남전략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히려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어내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dominant power)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략국가’를 건설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으로서도 미중 전략경쟁에서 북-중-러 협력의 과시를 통해 미중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미국 주도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김정은의 전승절 행사 참여를 통해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를 제한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승절에서의 3각 협력을 암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 북-중-러가 외형상 외교적 연대를 과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북중관계는 기존에 비해 협력추세가 당분간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3자 간 완전한 신뢰의 회복이나 이해관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베이징은 평양 및 모스크바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상은 당분간 회피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의 수위를 조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북러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중 및 한러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對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부각하는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한-미-일 협력이 특정 국가나 체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및 지역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리 역시 적극 전개해야 한다. 북-중-러 협력구도 속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지원할 가능성도 경계하는 한편, 이들의 북한 핵보유국 지정사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의 한반도에 대한 위협과 국제 비확산체제의 와해 위험을 동시에 부각해야 한다. 한미 차원에서도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나 지나치게 급속한 미북관계의 개선이 대안으로 강구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목표를 수시로 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가시적 확장억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북-중-러 3각협력을 이용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진입 등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한미 간 협력 및 대응 방향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변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둘러싼 북한의 계산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북한은 이것이 가지는 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했을 것이고, 김정은은 방중에 따른 대내외 정책상의 다중적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가장 큰 동기는 그동안 북러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재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취하려 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가 더 많았고, 탈냉전기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계속했다. 2020년대에 들

어 중국은 북한 무역 전체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후원자였고, 아무리 상대적이라고는 하지만 베이징과의 관계가 냉각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3년 북러 밀착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북한은 중국과의 고위급 대표단 교환을 그대로 유지했고,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간의 축전 외교 역시 계속되었다.¹ 북한은 이러한 관리 수준의 북중관계를 뛰어넘어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보임으로써 더 많은 외교 및 경제적 지원을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외교적 기동은 2023년 이후 급속한 밀착관계를 과시해온 러시아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4년 6월 평양과 베이징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그해 말에는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이루어졌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얼마만큼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보상으로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북러 간의 거래가 국제적 명분면에서 그리 떼떽하지 못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러시아의 대북 기여는 북한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9월 북러 간의 정상외교가 가동되었고 북한군 파병 이전에 이미 일정 부분의 보상이 제공되었을 것이지만, 러시아는 2024년 북한의 대외 무역 상대국 1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했다.²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있어 러시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년 11월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이후 2025년 5월 추가 발사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만큼 충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년 5월 모스크바에서 전승절 행사가 있었으나, 김정은은 이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고 축전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북한군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에 대한 영웅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이를 포장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전상자에 대한 예우 및 영웅화는 금년 8월 말에 이루어졌다.³ 이 역시 외형적인 밀착의 이면에서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김정은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돈독히 해두는 것이 향후의 미북 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계속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자신들이 선제적인 양보를 하면서까지 협상에 집착하지

는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해왔고,⁴ 이것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 역시 김여정의 7월 말 담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정상 간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당장은 대화할 생각이 없고 특히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8월 14일의 담화를 통해서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공격했다.⁵ 북한은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간이 북한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후원자인 중국에 밀착하고, 더 나아가 북-중-러 연대관계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넷째, 전승절 참가를 통해 김정은은 그들이 표방해 온 '전략국가', 즉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지위를 건설한 자신의 업적을 인민들에게 부각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강성대국'을 표방해왔지만, 김정은은 선대와는 차별화되는 업적을 추구했을 것이고, 이는 결국 베이징과 모스크바라는 전통적 후원자들로부터 단순히 균형을 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중-러 연대를 견인하는 동등한 협력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었을 것이다.⁶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김정은은 이러한 대내 선전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했고, 중국 역시 이러한 김정은의 희망을 충족시켜주는 의전상의 예우를 해주었다. 김정은은 전승절 참석 이후 북중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어떠한 여건 변화에도 북중 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송했다.⁷ 북한은 김정은 방중의 결과를 대내적 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증폭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10월 10일로 예정된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2026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위상강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노린 것은 한국 사회 내의 대북정책 논란일 것이다. 즉, 8월 23~27일간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및 한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중심의 대외정책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한국 사회 내에 확산되기를 노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유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김정은의 전승절 참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김정은의 방중이 8월 23일의 한일 정상회담이나 8월 25일(미국 현지시각)의 한미 정상

회담에 의해 급하게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김정은 방중은 그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다짐한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⁸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일부의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 역시 남북한 간의 단절을 외치면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자극하는 행태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의 김정은 초청 의도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이번 전승절 행사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북한 및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김정은 초청을 통해서 최근 냉각 기류가 흐르는 것처럼 해석되던 북중관계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수사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왔지만, 최근 북러 군사밀착이 심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2024년 다롄(大連)시 시진핑-김정은 발자국 동판 제거, 왕야진(王亞軍) 주북 중국대사의 북한 전승절 행사 불참,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전원 철수 요구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025년 4월 왕야진 대사의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 참석 등으로 북중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하고 김정은을 시진핑과 푸틴과 나란히 서게 하며 예우한 것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빠르게 회복 및 발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중-러 정상을 한자리에 모으며 북-중-러 연대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 각각 양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가속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국제협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그래서 중국은 북-중-러 연대가 서구 언론의 왜곡과 편견이라고 주장하는 한편,¹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 "배타적 '소그룹'과 '소집단'을 규합해 진영 대결과 군사 블록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는" 행위로 매도해 왔다.¹¹ 올해 5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불참하며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도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² 그러나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김정은과 푸틴이 나란히 선 모습을 연출

하면서 북-중-러 간 우호와 협력관계를 과시했다.

중국이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을 보인다. 첫째, 러시아 및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미중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해서 러시아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이라는 정치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중러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적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³ 지난 8월 15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정상회의에 이어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 중러관계를 일종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북한과의 관계 회복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¹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미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일이었다. 2018년 진행된 미북대화 국면에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했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미북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사전에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미북대화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북대화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높이려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해 이번 북중관계 회복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미 정책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25년 6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을 공언한 만큼 한국 신정부가 한중관계의 회복을 모색하고 미중 간에 균형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¹⁵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에 대한 존 햄리(John Hamre) 소장의 질문에 한국은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답했다.¹⁶ 이러한 발언을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무조건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한 환구시보 시론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실망과 우려를 잘 말해준다.¹⁷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8월 28일에 중국이 김정은의 전승절 참석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 시진핑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김정은을 초청함으로써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2023년 말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비록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김정은을 전승절 행사에 초청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중국을 배제할 수 없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주도의 북-중-러 연대를 시사하며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다. 중국은 미국 대선 직후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역내 미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동맹 및 협력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했던 반중 연대의 결속력이 약해질 것을 기대하고 관계 개선의 토대를 닦은 것이다.¹⁸ 그러나 현재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있지만 북핵과 북러 군사밀착이라는 실질적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와 "하나의 전구(One Theater)" 제안,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라는 이름하에 논의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동맹의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역내 미국의 동맹체제가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을 초청하고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중국 주도의 3자 연대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미국과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협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형성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만약 중국 주도의 북-중-러 연대가 형성된다면 지역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한-미-일 3국의 안보위협 인식에 따라 안보협력이 주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안보와 대만 유사 사태 간 상관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를 우선시해야 하는 한국이 동맹 범위 확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일 것이다.

향후 북-중-러 협력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이번 전승절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시진핑은 향후 反미 및 反서방 연대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역시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3인은 행사 내내 친근한 모습을 과시하였고, 열병식 현장에서도 여타 26개국 정상에 비해 가장 주목받는 위치를 차지했다. 결국 전승절을 통해 북-중-러 3각 협력체제를 시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 북-중-러가 외교적 연대를 과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legitimate security concern)”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 역시 앞으로 더 거세어질 것이다.

다만, 북-중-러가 완전한 3자 연대의 형태로 움직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들은 3자 정상의 천안문 망루 등장을 66년 전의 북한 김일성,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 소련 공산당 서기장 회동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냉전시대에서도 북-중-러가 완전한 하나의 연대체로서 움직인 경우는 1950년대 초의 6.25 전쟁 시기에 불과했다. 1959년의 3자 회동시기에도 이미 중국과 러시아(舊소련)는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북한 내의 친소파 및 친중파 숙청 여파로 베이징과 평양, 평양과 모스크바 관계도 원만하지만은 않았다. 실제로, 천안문 망루에 선 3인이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달랐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지적인 대로 3자 간 동등한 협력자로서의 인상을 바랐을 것이지만, 시진핑이 그린 그림은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국가인 중국을 보조하는 러시아와 북한(그것도 서열이 있는), 푸틴은 다극화 국제

질서의 한 축으로 적지 않은 지분을 지니는 러시아를 상상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결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사불란한 정책적 일치,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의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고, 북러, 북중, 중러의 양자적 관계 위주로 북-중-러가 선택적으로 연대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김정은을 초청한 중국의 향후 행보 역시 파격적이기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전승절 행사 전에 개최된 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패권주의'와 '냉전적 사고방식'을 비난한 것을 볼 때,¹⁹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중관계가 역사적으로 역내 안보환경과 양국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온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북중관계의 실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카드를 미중관계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만큼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북중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향후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한다고 해도 대북 제재 강화나 대북 비난에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단체관광과 북중 경제교류를 점차 확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북중관계의 회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19년 6월에 이어 또 한 번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격화를 불러올 북-중-러 연대를 꺼려할 것이며, 열병식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행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전승절 기간 중 중러, 북러, 북중의 양자회담은 열렸지만, 북-중-러 3자 회의는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북-중-러 3각 협력이 직접적인 대미 대항연대로 해석되는 것을 중국도 경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북-중-러 협력의 상징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중러 합동 훈련에 북한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이를 주시할 필요는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북러 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당분간 북러 밀착의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종료된 이후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러시아의 실제 대북 보상이 북한이 바라는 수준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고, 북한 역시 러시아 경사가 가져오는 자율성의 침해 위험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은 핵기술뿐만 아니라 재래전력의 현대화에 있어서도 모스크바의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첨단 무기공급 능력의 확장을 통해 잠재적 분쟁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할 러시아가 이에 부응할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의 균형보다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평화 對 전쟁”의 구도를 이야기하고, 평화의 수호를 위한 참가국들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결국 이는 권위주의 체제들 간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는 정책방향을 전개하려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약화된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이들이 보상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며, 오히려 더 많은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레버리지를 강화할 것이고, 베이징과 모스크바 역시 미국과의 경쟁을 고려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바랄 것이다.

둘째, 이에 대한 대응논리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이나 한-미-일 협력이 자신들에 대한 견제이고,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적대시하거나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안정을 침해하고 보편적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국제 여론에 호소해 나가는 데 있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공조 역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중-러 협력구도 속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지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미 북러 밀착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핵기술을 간접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낳고 있고, 중국의 경우 전승절 기간 중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기존과는 달리 ‘무핵화(无核化,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베이징 역시 북한 핵무기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²⁰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의 미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무핵화’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김정운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이 북핵 용인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중국 스스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

는 대국(大國)임을 표방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비확산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북한 핵개발 용인을 선택하기도 한계가 있다. 다만, 기존에 비해 중국이 대북 제재의 우회나 회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북한 핵개발을 사실상 방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 핵이 한반도에 가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적극 부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모순성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공조 차원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각종 회담이나 협의에서 수시로 부각해 나가야 한다.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나 공동 언론발표문이 발표되지 않기도 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공개회담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²¹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을 차단하는 “핵군축회담”을 추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며, 북한 역시 이러한 방향의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북제재 전면 해제나 지나치게 급속한 미북 관계 개선이 미북 협상의 대안으로 강구되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공통 목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북한 핵능력 해체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일단 동결단계에서 출발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확실한 대북 핵보복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가시적 확장억제 조치 역시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앞서 말했듯이 북-중-러 협력이 직접적인 군사적 3각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적 측면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동참을 허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자 합동 해상훈련이나 항공훈련 등이 실시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활용하여 북한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로 우리의 대비태세를 흔들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강조하려 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중-러가 연대한 새로운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간의 대응 수단 역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들이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도발의 무용성을 절감하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¹ 차두현, 홍상화,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02 (2025.01.08), pp. 3-4.

- ² KOTRA, 『2024 북한 대외무역 동향』, KOTRA 자료, 25-091 (서울: KOTRA), p. 1.
- ³ “김정은 ‘파병 전사자 유족, 내가 직접 거두겠다... 다시 한번 속죄,’” 『조선일보』 (2025.09.01).
- ⁴ “Trump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NK leader Kim: White House,” *Korea Times* (June 12, 2025).
- ⁵ “김여정 ‘북미정상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렁,’” 『연합뉴스』 (2025.07.29);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5.08.14).
- ⁶ 차두현, 홍상화, “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 p.10.
- ⁷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었다,” 『노동신문』 (2025.09.05).
- ⁸ “대통령실 ‘김정은 방중 미리알아...이런 흐름이 한미회담에 영향,’” 『연합뉴스』 (2025.08.28).
- ⁹ 이동균,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3-29 (2023.12.20).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422&page=2.
- ¹⁰ “China, Russia won’t mind US attitude to enhance strategic consultations,” *Global Times*, 2023.09.18.,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9/1298430.shtml>.
- ¹¹ “2023년8월18日外交部發言人汪文斌主持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2023.08.18.,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308/t20230818_11128713.shtml.
- ¹² 이동균,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16 (2025.06.10).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21.
- ¹³ Sanshiro Hosaka, “Why the ‘Reverse Nixon’ Strategy Will Fail: The Illusion of Decoupling,”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 2025.03.17., <https://icds.ee/en/why-the-reverse-nixon-strategy-will-fail-the-illusion-of-decoupling/>.
- ¹⁴ “트럼프 “김정은 다시 보게 될 것...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2025.08.26).
- ¹⁵ 唐曉&周曉倩, “中韓關係這些年走過的陰晴冷暖,” 中國國際問題研究院 時事評論, 2025.08.26.,
https://www.ciis.org.cn/yjcg/sspl/202508/t20250826_9652.html.
- ¹⁶ ““안미경중 더 이상 불가능... 실용외교 강조,” 『YTN』 (2025.08.26).
- ¹⁷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8/1341793.shtml>
- ¹⁸ 아산정책연구원,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5 리뉴얼(Renewal)』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4.12), pp. 55-57.
- ¹⁹ “Full text of Xi Jinping’s speech at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lus’ Meeting,” The State Council of China, 2025.09.01., https://english.www.gov.cn/news/202509/01/content_WS68b584acc6d0868f4e8f53c8.html.
- ²⁰ 서로 다른 북중 발표...“비핵화-적대적 2국가 입장 등 한반도 문제 이견 가능성,” 『조선일보』 (2025.09.05).
중국은 2018년과 2019년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76205/1206_676404/xgxw_676410/201806/t20180619_9290364.shtml .
https://www.mfa.gov.cn/wjb_673085/zzjg_673183/yzs_673193/xwlb_673195/201906/t20190620_7491229.shtml.
- ²¹ 물론,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7월 말의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이의 회담에서는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Secretary Rubio’s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Cho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